

보도시점 : 2025. 9. 1.(월) 06:00 이후(9. 1.(월) 석간) / 배포 : 2025. 8. 29.(금)

교통문제 해소와 미래 모빌리티, 정부-민간이 함께 만든다

- 9월 1일 민-관 합동 K-교통 얼라이언스 발족
- 교통기본법 제정, 모빌리티 혁신 성장 전략 등 추진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수도권 내, 수도권-지방의 교통 격차 등 당면한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「민·관 합동 K-교통 얼라이언스」(이하 얼라이언스)가 9월 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.

* (일시/장소) '25.9.1(월) 10:30~11:30 / 서울 워커힐 호텔

** (슬로건) 이동의 권리를 국민 모두에게 / (부제) NUMA : Next Urban Mobility Alliance

*** (참석) 정부(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, 새만금청), 지자체(강원, 경기, 제주, 전북 등), 공공기관(교통연구원, 교통안전공단, 코레일, LH 등), 업계(현대차, KT, 네이버 클라우드, 티맵 모빌리티, 현대카드, CJ대한통운, 한화손해보험, SK네트웍스, SK스피드메이트 등)

□ 최근 수도권-비수도권 교통 격차, 교통약자와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 불편 해소 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방향 전환과 함께 AI 등 기술혁신을 이끌어 갈 민간기업과 유관기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.

- 정부는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교통 소외지역과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,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도 연내 수립할 계획으로,
- 이 과정에서 산·학·연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, 실제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·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

□ 이번에 출범하는 얼라이언스는 국토교통부와 현대자동차가 공동 주관 하였으며, 교통격차 해소, 교통안전 강화, 교통 데이터 협력 강화,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네 가지 전략 하에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정책 과제로 설정하여 민간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, 학계뿐만 아니라, 교통·통신·물류·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 기업도 참여할 계획으로, 관심 있는 기업 및 기관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.

○ 아울러, 미래 모빌리티 분야는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는 모빌리티 혁신 포럼과 연계하여 성장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.

* 모빌리티혁신포럼 : 모빌리티 분야 민·관 협력체계 구축 및 합동 전략 모색을 위해 구성^(23.2~)

□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“교통은 이제 단순 인프라가 아닌, 국민의 일상이자, 삶을 연결하는 필수 서비스로서, 국민은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.”며,

○ “민·관이 힘을 합쳐, 교통 격차 없는 대한민국,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사회를 위해 나아가길 기대한다” 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교통물류실 교통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배석주	(044-201-4166)
		담당자	서기관	최은영	(044-201-3792)
			주무관	이전욱	(044-201-4080)
유관기관	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	담당자	연구위원	임서현	(044-211-3075)
	교통안전공단 정책지원처	담당자	부장	조성진	(054-459-7423)

□ 추진배경

- 수도권-지방 불균형, 인구 고령화 등으로 교통소외지역, 교통약자는 증가하는 등 국민 이동권에 지역별·계층별 격차 발생
- 교통기본법 제정 등 현 정부 국정과제를 조속 이행하고, 발전된 AI 기술을 교통산업 내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공공-민간 협력 중요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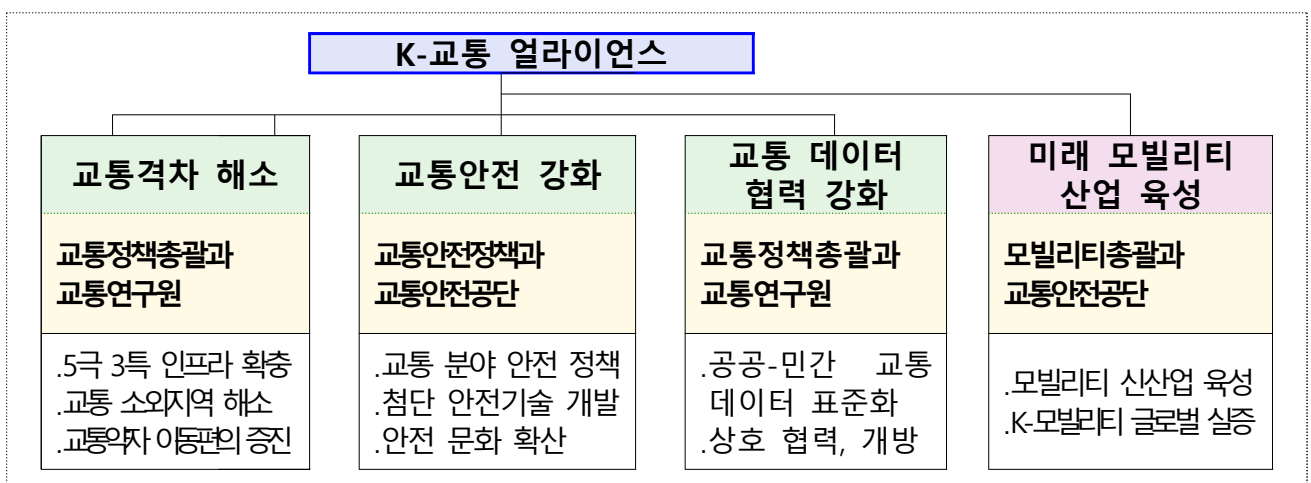
* 교통 소외지역, 교통약자 등 정부 정책달성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 필수

⇒ 수도권-지방 교통격차 해소, 약자 보호, 안전강화 등 현 정부의 교통분야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해 민간 참여 유도, 협력 강화 추진

□ K-교통 얼라이언스 구성 및 운영 방안

- **(구성)** 국토부 - 현대차(공동 주관), 중앙부처·지자체(6개 기관), 민간 (CJ, KT, 네이버 등), 공공기관(TS, KOTI 등) 등 30여개 기관

※ 개방형 Alliance 형태로 협의체 및 참여사 지속 확대



- **(운영)** 민-관 협업 과제 발굴 및 협력 강화 (분과별 회의 개최)
- **(성과)** 모빌리티 혁신 성장 전략^{가칭} 발표(연내), 성과 발표회 개최('26.8)